

[청구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고, ○○○○ 버스노선을 임의 감회 운영하여 인천광역시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20○○. ○○. ○○.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다. 피청구인은 20○○.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과징금의 ○○○○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번 노선을 감회 운행한 것은 노후차량 정비, 교통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회하였거나, 방학 및 추석연휴 동안 감회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 회사는 경영난,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시급 인상 등 비용증가,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 검토 후 적법한 감회는 감회운행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나. 운수업체에서는 차량고장 및 고장 등의 경우에는 예비차를 두어 대체운행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병과 합산액은 ○○○○○원이나 1/2을 감경하더라도 최고한도액 ○○○○만원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만원을 부과처분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3, 별표5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노선 ○개(○○○○번, ○○○○번, ○○○○번, ○○○○번), 버스 ○○대를 인가받아 운행 중이다.

2) 청구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회 감회운행 하였는데 그 중 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공휴일, 방학기간, 명절연휴 기

간 등 적법한 감행운행 회수를 제외하면 위반횟수는 ○○○회(20○○. ○○. ○○.~20○○. ○○. ○○.), ○○○회(20○○. ○○. ○○.~20○○. ○○.○○.)이다.

3) 감회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1)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와 운행횟수를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12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같은 법 제10조(같은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88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같은 법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7호 가목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의 하나로 임의로 감회 또는 증회 운행[4)]을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비고란 제5호에서는 같은 별표 제1호 위반내용란 제7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 1회당 위 표의 처분 기준 금액의 50퍼센트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살펴보면,

가) 위법성 여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6조제1항 별표3, 별표5에 따라 적법하다.

나) 부당여부(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청구인은 “○○○○번 노선을 감회 운행한 것은 노후차량 정비, 교통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회하였거나, 방학 및 ○○연휴 동안 감회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방학 및 ○○연휴 등 적법한 감행횟수는 위반횟수에서 제외하였고, 노후차량 정비, 교통사고 발생 등의 경우 예비차를 운행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감행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그 위반횟수도 너무 과다하다.

다) 청구인은 “경영난,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시급 인상 등 비용증가,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 부당하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의로 감행하는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됨으로 입게 되는 공익의 침해정도가 크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병과 합산 금액이 ○○○○○만원인데 최고한도액이 ○○○○만원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과징금 ○○○○만원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